

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

2025. 4. 11.

관 세 청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방향 및 대응 체계	3
III. 관세행정 대응 전략	4
1. 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	4
2.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	6
3.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 차단	9
IV. 추진 일정	12

I. 추진 배경

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('25년 4월 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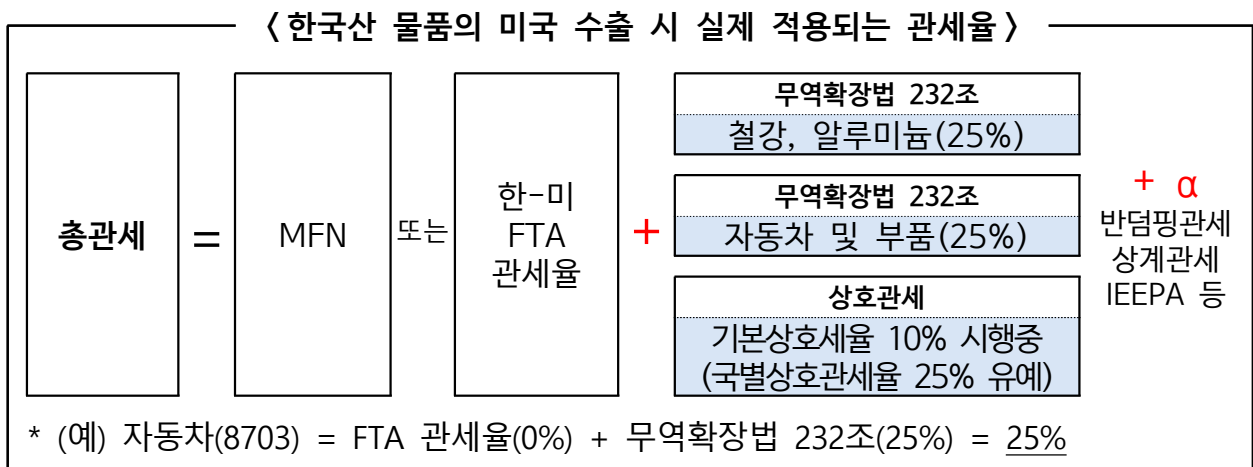
- (우리나라 25%) 모든 국가 수입품에 추가로 10% 종가세를 부과 (4.5. 시행)하면서 57개국은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 부과*

* 우리나라 25%, 중국 125%, EU 20%, 일본 24%, 베트남 46%, 대만 32% 등이며, 4.9일 중국을 제외한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(기본세율 10%만 시행 중)

※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주요 현황

- ① (3.12) 철강·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% 관세 시행 (무역확장법 제232조)
- ② (3.26)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부품에 추가 25% 관세 발표 (무역확장법 제232조)
- ③ (4.2)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, 우리나라 25% (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)

- (상호관세 부과 체계) 기본관세 또는 한-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,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



②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대미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 가중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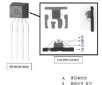
- (정보부족 호소)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*에 따르면 미국 관세 정책 내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정보제공을 지원 1순위로 선정

*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('25.3월, 중기중앙회)

- ① (응답) 철강·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600여개 사(중기중앙회, 철강·금속 등 20개 조합)
- ② (결과) ^{애로}미국 관세정책 파악 어려움(42%, 1위), ^{정부지원}관세 관련 정보제공 필요(51%, 1위), ^{파생상품수출}HS코드 상담, 관세액 산정 컨설팅, 통관절차 대행, 원산지교육, HS교육 등 필요(1~5위)

- (품목분류 및 원산지 중요성 증대) 대미 수출물품의 관세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품목번호(HS Code) 확정이 중요

〈 상호관세(25%) 시행 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 차이 〉

구분	미국 품목번호	상호관세	
		대상 여부	세율(%)
반도체 품목	 광전지 (8541.43.00)	부과	25%
	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(8541.51.00)	제외	0%

- 상호관세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**비특혜 원산지기준***이 적용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

*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)이 「실질적 변형기준」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동 기준은 영미법 체계에 따르므로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법, 정성적 판단에 근거

〈 상호관세(25%) 시행 시 원산지에 따른 관세율 차이(제도용 잉크:베트남산 부품 사용) 〉

구분	FTA		상호관세		결정세율(%)
	FTA 원산지기준	세율(%)	비특혜 원산지기준	세율(%)	
한-미 FTA 활용기업	충족	0	충족	25	25
			불충족(베트남산)	46	46
한-미 FTA 미활용기업	-	3.1	충족	25	28.1
			불충족(베트남산)	46	49.1

③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높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* 가능성 증가

* 우회수출 주요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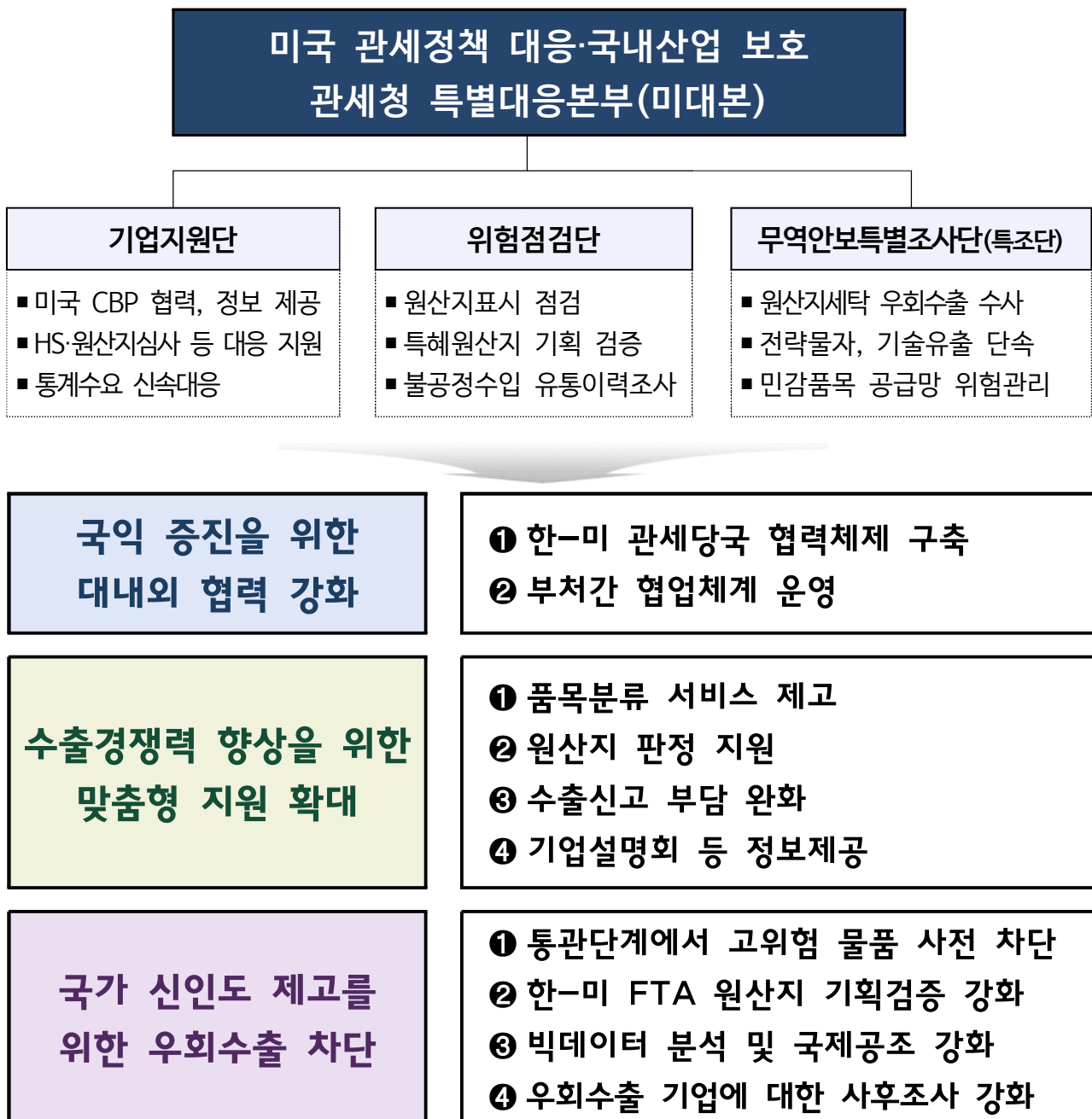
- ① 제3국 외투기업이 제3국에서 반제품 수입, 단순가공 후 한국산으로 대미 수출
- ② 국내 무역업체가 제3국에서 반제품 수입, 단순가공 후 한국산으로 대미 수출
- ③ 국내 무역업체가 제3국에서 완제품 수입,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대미 수출
- ④ 우리 제조기업이 제3국에서 부품 수입, 가공 후 한-미 FTA 활용 대미 수출

- (선량한 우리기업 피해 우려)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경유지로 활용될 경우 국가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하여 미국의 규제 강화 예상

Ⅱ. 추진 방향 및 대응 체계

- ◆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국익 제고를 위한 관세청 총력 대응체계 운용
- ◆ 한-미 관세당국간 협력 및 부처간 협업 강화
- ◆ 품목분류·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
- ◆ 우회수출을 차단하여 국가 원산지 신인도 제고

□ 대응 체계 ('25. 3. 28~)



Ⅲ. 관세행정 대응 전략

1

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

① 한-미 관세당국간 협력 체제 구축

- [현황]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*)이 우리 대미 수출품의 관세부과·징수·통관을 담당하므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

* (U.S.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 우리나라 관세청 +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+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

- [대응] 한-미 관세당국 간 협력회의 개최(5.8. 예정) 등 채널을 추가동하여 미국 관세정책 관련 세부정보공유 및 기업지원 방안 협의

- ① (정보입수)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함량 과세물품 수입신고 방법, 철강·알루미늄 함량 가치 입증방안 등 수출 기업에 긴요한 정보 입수*

* (필요성) 미국 CBP 측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(관세 25%)에 따른 함량과세 대상 파생제품 신고방법 등을 간략히 공고하여 우리 기업의 혼란 초래

- ② (품목분류) 양국 간 품목분류 이전 최소화 등을 위한 협의채널 구축

- ③ (원산지) 상호관세 부과물품 등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기준의 경우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CBP의 사전심사*가 가장 효과적

* (Advance Ruling) 원산지, 품목분류 등 관세 부과 시 고려되는 중요요소를 사전에 판정해 주는 제도로 판정결과는 CBP-수출업자·생산자 간에 구속력 발생

- 각종 판정사례, 품목별 판정기준 등을 입수하여 수출기업에 제공

- ④ (원산지 신인도 제고)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출 단속현황,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점검 등 관세청 활동을 미국에 적극 홍보

-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

※ CBP 차기 관세청장 부임* 이후 한-미 관세청장회의 개최 추진

* 차기 청장 지명자(Rodney Scott, 前 국경순찰대장)의 미국 의회 청문회 일정 미정

② 부처간 협업체계 운영

- [현황] 대미 수출 중소기업*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및 칸막이 제거가 중요

* 대미수출기업 중 중소기업은 23,507개사, 전체 98.8% 차지('24년 기준)

- [대응] 대외 협력채널 등을 통해 확보한 세부정보를 신속하게 공유

① (중기부) 관세청-중기부 간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

-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(6개) - 중기부 수출지원센터(15개) 간 핫라인 운영으로 수출애로 종합상담 서비스의 양과 질 대폭 개선

*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한 공익관세사 41명과 지방중기청 관내 중소기업을 연계

- 중기부 수출지원사업(수출바로프로그램, 예산 290억원)에 관세청이 발굴한 정부지원 필요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양 기관 지원 시너지 제고

- 중기부의 지방권역별 릴레이 설명회에 관세청 참여(3~4월, 6회)

- 관세청-중기부 간 기업지원을 위한 MOU 체결 추진

② (산업부) 수출기업지원 원팀*에 참여하여 종합지원체계 구축

* 산업부, 특허청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무역보험공사(3.26)

-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('25.2.18.)을 신속히 이행

- 수출정보, 맞춤형 컨설팅 등 합동 지원 및 정책 서비스 제공 협업

③ (협회) 산업협회 협력회의*를 통해 협회 회원사 대상 미측 관세정보 전파(기존 분기 1회 개최 → 수시 제공) 및 애로사항 상시 수집

* 철강, 비철금속, 자동차모빌리티, 자동차산업 등 총 10개 산업협회 참여

④ (데이터) 기재부, 산업부 등의 정책수립 및 집행 지원을 위해 수출입 현황, 무역수지, 대상품목 등 대미 무역 데이터 신속 제공

- 정부기관, 경제연구소, 기업 등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하게 조회·활용할 수 있도록 「미국 전용 무역통계 서비스」 구축*

*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(<https://tradedata.go.kr>) 내 운영(5월 예정)

① 품목분류 서비스 제고

□ [현황] 중기중앙회 설문조사('25.3) 결과 중소 수출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자사 수출물품의 미국 품목번호임

○ 수출품의 품목번호* 확정⇒ 관세율 결정 후 기업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

* (품목번호) 국제표준 품목번호로 6단위까지는 전세계 공통이고 7단위 이후로는 각 국별 세부번호를 추가해 운영(미국, 한국 양국 10단위까지 사용)

□ [대응]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 및 서비스 제공

① 한-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

○ 미국 품목번호와 한국 품목번호 10단위를 연계한 표 작성

⇒ 주요 산업협회, 산업부·중기부 등 정부기관 등을 통해 안내

* 전자통관시스템(Unipass)를 통해 수출자에게 팝업으로 안내 예정(4월말)

- 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 연계표는 이미 공개(3.14)하였고,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과 상호관세부과 제외대상도 공개 예정(5월)

② 관세평가분류원에 「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」 개설 (042-714-7538)

○ 품목분류 관련 상담 및 CBP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문의 대응

○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,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애로신고센터 등 대내외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내용별로 맞춤형 안내 지원

③ 대미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Fast Track* 운영

* 대미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소요 기간 단축

현행	⇒ 전용 신청 탭 신설 ⇒	개선
평균 소요 16.8일		평균 10일 이내

○ 대미 수출 관련 안전을 우선하여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

② 원산지 판정 지원

□ [현황]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,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의 경우 **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적용**

○ 비특혜원산지 기준*에 대한 중소 수출기업의 문의가 대폭 증가

* 미국 CBP는 물품의 용도·특성·명칭의 변화 등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원산지국을 판정

□ [대응] 수출물품의 비특혜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**미국 사전심사 제도**를 안내하고, 미충족 고위험제품군에 선제적인 정보제공

①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안내

○ 중소기업이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eRuling 시연 동영상* 제작·배포('25.4월말 예정)

* 온라인을 통해 **Ruling** 신청(eRuling)시 단계별 입력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안내

가이드북(시안)	e-Ruling 시연 동영상(시안)
	 https://erulings.cbp.gov (신청 사이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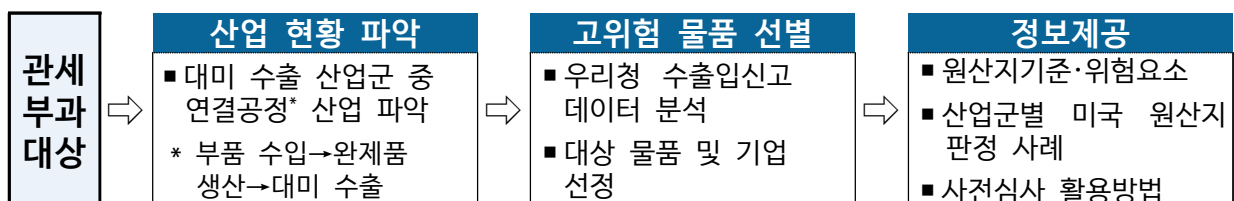
② 비특혜원산지기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

○ 고세율 국가의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국내생산한 「연결공정제품」 중 원산지기준 미충족 **고위험제품군***을 선별하여 사전에 위험 정보

* (예) 중국산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한 전력공급용 케이블

→ (FTA) 품명변경 기준 충족 vs (비특혜) 국내 공정이 단순하므로 중국산으로 판정

〈 비특혜원산지기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 〉



○ 고위험제품군 수출기업에게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등 정보 제공 및 미국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안내

3 수출신고 부담 완화

- [현황] 새로운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신고 정정 등 기업부담 가중
- [대응]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및 철강제 물품의 수출통관절차 간소화
 - ① (오류점수 부과면제) 수출신고 정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오류 점수가 누적될 경우 P/L 신고제한과 수출검사 비율상향 등 불이익 발생
 -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 사유인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
 - ② (선상수출신고 확대)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 가능한 철강제 관류 (HS 73류)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야적장 보관에 따른 운송료·체선료 절감 지원
 - (현행) HS 72류 철강 → (개선) HS 72류 + HS 73류

4 기업설명회 등 정보 제공

- [현황]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한 애로사항 1위는 미국 관세정책 파악 어려움, 정부지원 필요 사항 1위도 관세 관련 정보제공
- [대응]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운영
 - ①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(종전 8월 → 개선 5.14. 서울, 5.16. 부산),
 - 미국 주재관이 참석하여 정보제공과 1:1 상담 활동 전개
 - ② 자동차·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(5월)
 -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자동차·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대상 분류체계 개요 설명 등
 - ③ 미국 현지 통관전문가 웨비나 추진(5월)
 - 미국 공익관세사 초청 민관 합동 미국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

3

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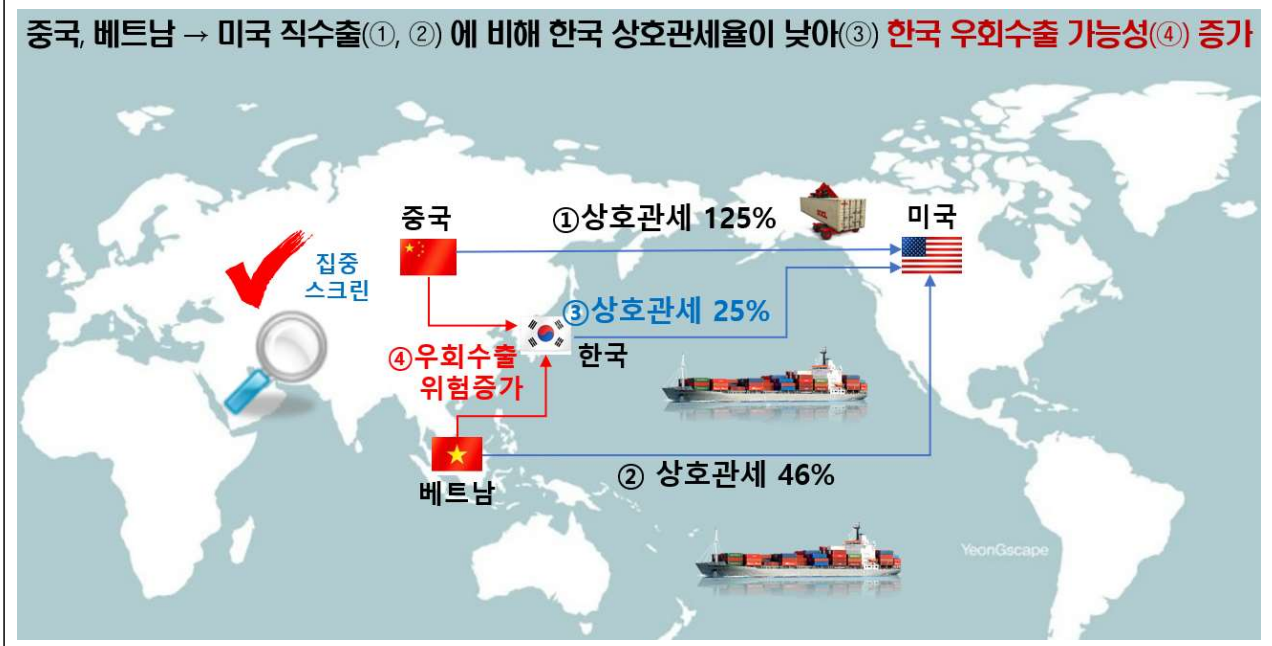
① 통관단계에서 고위험 물품 사전 차단

- [현황] 우리나라(25%) 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*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할 가능성 증가

* 중국(125%, 4.10. 시행), 베트남(46%), 태국(36%), 캄보디아(49%), 인도네시아(32%)

〈국가별 상호관세 차등부과에 따른 우회수출 위험증가〉

중국, 베트남 → 미국 직수출①, ②)에 비해 한국 상호관세율이 낮아③) **한국 우회수출 가능성④) 증가**



- [대응]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검사 강화

- ① (고위험물품 수출검사 강화) 최근 동향·적발사례·우회수출 패턴 등 우범요소를 반영한 선별 기준(Cargo Selectivity)을 개발
 -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원산지위반 물품 차단
- ② (CBP와 우범정보 공유)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세탁 고위험 물품정보를 CBP에 제공하여 현지 적발 지원

(참고) 우범정보 예시

- ❶ 제3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 절차 없이 미국 반송
- ❷ 동일한 기업이 같은 품목을 수출입시 원산지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

② 한-미 FTA 원산지 기획 검증 강화

- [현황] 상호관세 등 부과로 한-미 FTA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, 양국 간 신뢰 강화를 위해 한-미 FTA 악용 사례는 철저히 단속 필요
- [대응] 한-미 FTA를 활용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품목군에 대한 선제적 수출검증 실시

〈 고위험 대미수출품목 선정 절차 〉

경과	① 분석대상 선별(1월)	② 심층 정보분석(2월)	③ 대상업체 선정(3월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CBP의 주요 검증품목 ▶ 미국 수입규제 품목 ▶ 동일 HS 세번 물품 수출입업체 등을 종합 고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원을 활용한 우회수출 위험도, 공장 보유여부 확인 ▶ 대미수출실적과 수입실적 등의 추가 비교분석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원 심층분석 결과 + 자체 추가 정보분석 ☞ 검증대상 20개사 선정

-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,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* 가능성을 점검

* ① 원상태 우회수출, ②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, ③ 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

- 원산지 규정 위반이 명백한 고의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

③ 빅데이터 분석 및 국제공조 강화

- [현황] 상호관세 등의 과급효과 및 글로벌 무역체제에 대한 입체적 분석 필요
- [대응] 빅데이터를 통한 거시적 분석과 유기적인 한미 정보협력 체계 구축

① 이슈품목 리스크 관리

- 수출입신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 철강·알루미늄 등 관심 산업 분야 품목 전반의 이상징후 모니터링*으로 이슈 신속·적시 대응

* 수출입데이터에 나타나는 단가·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하여 불법징후 탐지

② 한-미간 정보교환 확대

- 미국 관세당국 등의 요청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내 수출입 기업 관련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, 미대본에 즉시 전파·대응

③ 글로벌 무역정보 분석 강화

- **GTA***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감품목 중심으로 국가간 무역량 변화 등 위험징후를 분석하고,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

* Global Trade Atlas, 국제무역 통계 정보사이트

④ 우회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조사 강화

- **[현황]** 우회수출 요인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후조사 강화 필요
- **[대응]**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의 고관세 품목, 덤핑방지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관세율 인상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

〈 (예시)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시 세율 비교 〉

구분	MFN	301조	대중국 추가관세		철강관세	상호관세	최종관세
			'25.2	'25.3	'25.3		
한국 수출 시 (FTA 체결국)	0%	-	-	-	25%	철강관세와 합산 안됨	25%
중국 수출 시 (FTA 미체결)	0~10%	25%	10%	10%	25%	철강관세와 합산 안됨	70~80%

- (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) 미국의 제3국 대상 덤핑관세 부과대상*이며 최근 2년 제 3국→한, 한→미 수출입 규모가 큰 품목(연간 1천만달러 이상)

* 철강, 알루미늄, 가구, 문구류 등

- (국가간 경쟁산업) 미국은 관세를 통상협상을 위한 '레버리지'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인접국가*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고관세 물품

* 중국·베트남산 철강, 알루미늄 등

- (특정국가·품목) 미국에서 특정국가 수입금지 품목*, 통상협정 체결국에서만 수출 가능한 정부조달물품을 미체결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

* A국 통신장비, 영상감시 장비 등

추진 과제	일정
1. 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	
▪ 한-미 관세당국 협력체제 구축	'25.5
▪ 부처간 협업체계 운영	'25.4~
▪ 미국 전용 무역통계서비스 구축	'25.5~
2.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	
[1] 품목분류 서비스 제고	
▪ 한-미 품목번호표 연계	'25.5
▪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운영	'25.3~
▪ 품목분류 사전심사 Fast Track 운영	'25.4
[2] 원산지 판정 지원	
▪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안내	'25.4
▪ 원산지 불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	'25.5~
[3] 수출신고 부담 완화	
▪ 오류점수 부과 면제	'25.3~
▪ 선상 수출신고 확대	'25.5
[4] 기업설명회 등 정보 제공	
▪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	'25.5
▪ 자동차·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	'25.5
▪ 미국 현지 통관 웨비나 추진	'25.5
3.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 차단	
[1] 통관단계 고위험 물품 사전 차단	
▪ 고위험 물품 수출검사 강화	'25.4~
▪ CBP와 우범정보 공유	'25.4~
[2] 우회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조사 강화	
▪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단속	'25.4~
▪ 국가간 경쟁산업 단속	'25.4~
▪ 특정국가/ 품목에 대한 단속	'25.4~
[3] 한-미 FTA 원산지 기획검증 강화	
▪ 원산지 기획 검증 실시	'25.3~
[4] 빅데이터 분석 및 국제공조 강화	
▪ 이슈품목 리스크 관리	'25.4~
▪ 한-미간 정보교환 확대	'25.4
▪ 글로벌 무역정보 분석 강화	'25.4~